

불평등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바람직한 방안

박기학

글을 시작하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지난해 4월부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¹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5월 현재 거의 내용적으로 는 합의를 보고 있는 용산 협상은 올해 안으로 국회비준까지 마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우리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반세기 이상 주둔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고 또 서울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는 점에서 조속히 반환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논의 중인 용산 미군

1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통일 이후의 한미 안보동맹의 미래와 주한미군의 역할, 구조, 규모, 지휘관계 등에 대해 2003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여, 2년 내에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03년 4월부터 한국군의 대북 방위 역할 확대와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 미 2사단 특수임무의 한국군 이양, 한미연합전력 강화, 미 2사단 및 용산 미군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 한미연합지휘체계 변경 등을 의제로 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가 2004년 5월 현재까지 모두 8차례 진행되었다.

기지 이전 협상은 이같은 국민적 여망과는 거리가 멀다. 한미 간 용산 미군 기지 이전 협상은 이전 비용 부담, 대체부지 제공, 적법성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국민에게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협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모든 이전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용산 미군기지의 시설대체가치PRV가² 13억 달러에 지나지 않은데도 우리 정부가 그 몇 배나 되는 30~50억 달러로 이전 비용을 추산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용산 협상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산 협상은 법적인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19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근거로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용산 및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을 명목으로 320만 평의 대체 부지가 제공되면 오래 전부터 457만 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평택은 완전히 미군을 위한 군사도시로 전락되고 수많은 주민들은 당장 자신의 생계터에서 쫓겨나야 될 형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고려한 것이라는 미국의 수사적인 말과는 달리 미국이 구상하는 세계군사전략과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한미동맹의 틀짜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넓게는 전세계 해외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좁게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

2 “시설대체가치는 국방부가 사용 중인 모든 시설물(빌딩, 구조물, 설비)과 주 정부, NATO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군 시설물의 PRV를 나타낸다.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이 PRV는 현재 건축비용(노동과 자재)과 기준(산출방법과 코드)으로 해당 시설(시설물 및 지원 사회간접 자본 포함)을 대체하는(다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Base Structure Report” 미 국방부, 2003)

로의 전환과 대중국 봉쇄 역할,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이용한 새로운 대북한 전쟁수행체계의 구축이라는 신군사전략의 구상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이같은 미국의 군사전략적인 필요와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앞으로 한미군사동맹관계가 더욱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관계로 될지 아니면 이를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지를 기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이처럼 우리의 자주권과 국익, 자존심, 수많은 지역 주민의 생존권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걸린 문제이지만 아직 그 실상이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부당한 이전 조건은 그것이 주로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적 이해와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이전 조건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올바른 방식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의 군사적 의도와 문제점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한국이 그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미국의 논리를 수용하여 이전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1990년이나 지금이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전세계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나 럽스펠드 국방장관, 허바드 주한미국 대사 등의 공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입증한다.³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용산 및 미2사단의 재배치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⁴

그런데 1990년의 경우에는 이번과 달리 우리나라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요구에 미국이 응한 결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정부도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다만 1990년에는 정통성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던 노태우 정권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사전협의하에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냉전 해체와 심각한 경제위기에 따른 해외미군 감축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던 미국은 1989년 년-워너 수정안과 1990년 동아시아전략구상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 방안을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19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 간 합의는 바로 이같은 미

3 “21세기의 새로운 전쟁개념과 전략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 미군의 전략적인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부시 미국 대통령의 미군의 해외 군사력 대세의 재검토에 관한 공식성명, 2003. 11. 26) “독일과 한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미군 구조 재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미 럽스펠드 장관의 나토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발언, 연합뉴스, 2004. 2. 7)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전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독일, 일본, 기타 여러 국가에 배치된 미군도 논의 중” (허바드 주한미대사 기자회견, 2004. 2. 10)

4 “미국이 용산 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은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것”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자유총연맹 임원들과의 오찬에서의 발언, 2004. 2. 12)

국의 정책 속에서 가능하고 현실화됐던 것이다.⁵

만약 미국이 자신의 군사전략상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민의 요구에 의해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본다면 합의 뒤 불과 1~2년도 지나지 않아 이전 비용을 빌미로 90년 합의를 백지화시킨 미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표면상으로는 이전 비용에 관한 이견을 내세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다. 왜냐하면 91년 7월 미국이 이전 비용으로 17억 달러를 먼저 제시했고 거기에 한국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92년 4월 미국이 이전 비용으로 95억 달러를 제시한 것은 합의를 깨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91년 11월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 지역 내의 안보가 완전히 보장 될 때까지 년-워너 2단계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⁶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의 백지화는 이같은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한 미국의 변화된 인식-1991년 걸프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다음 목표로 공공연히 북한을 지목하고 대북한 군사적 봉쇄 및 압박에 나섰다-가 그것이다. 그것이 북한 핵위기로 나타났다-속에서 용산 미군기지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미국의 입장이 선회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어디까지나 이전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한 속셈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5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1990년 당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맞물린 미국 내에서의 해외파병주둔군 조정(년-워너 수정안)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 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감정이 맞물려져 가시화되기 시작한 주한미군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방위비 부담, 작전통제권 이양, 병력 감축)의 일환”(35쪽)으로 보고 있다.

6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서 5번 항목, 1991.11.21.

용산 미군기지 및 미 2사단 평택 이전의 의도와 문제점

1. 평택 이전의 의도

미 부시 정권에 의해 전세계 해외 미군태세재검토GPR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기지의 재편·재배치는 신군사전략의 한반도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군사분야혁신RMA에 따른 새로운 전쟁수행개념과 주한 미군의 기동군으로의 전환을 한편으로 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대 중국 봉쇄를 기본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다.

우선 용산 및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은 군사분야혁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기동력과 정밀타격력 위주의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이 한반도에서도 실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한미연합사가 지난해 말 기동력과 정밀타격력 위주의 전쟁수행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작전계획 5026을 완성했다는 언론의 보도는⁷ 이같은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이 한반도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용산 미군기지 및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은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북한 선제공격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와 함께 이라크 전쟁에서 선보인 것과 같은 미군의 신속 기동 전개와 C4ISR(지휘통제자동화체계 및 정찰·감시체계)에 의거한 대북한 전격전 체계를 갖추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신속전개와 C4I(지휘통제자동화체계)에 의한 전격전의 지휘통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3월 5일 사상 처음으로 평택에서 항공을 통한 미 해병대의 M1A1 탱

7 작전계획 5026은 '유사시 전방지역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정밀공격, 수도권 피해 최소화', '북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즉집계 공격으로 북한 전쟁지휘 능력 조기 무력화', '핵 및 생화학 무기, 미사일 기지, 공군기지, 지휘소 및 통신시설 등 정밀공격으로 북한 전쟁능력 조기 마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조선일보》, 2004. 1. 20)

크, 상륙장갑차 등의 전투차량 수송 하역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기동성에 중점을 둔 ‘프리덤 배너 04’ 훈련이 실시된 것은 미국이 평택을 주한미군 기동군화의 최적지로 꼽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용산 및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은 또한 그 목적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로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키는 데 맞춰 미군기지 체계를 재편하려는 데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유럽 중시에서 아시아 중시로 바뀐 가운데 미국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이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기본 원칙으로 천명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⁸ 미국은 지난해 9월에 열린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때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양해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맞춰 바다로나 공중으로나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평택 미군기지에 대중국 봉쇄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2.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미군 재배치

1990년이나 지금이나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요구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

1990년 3단계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0년까지 최소한의 미군만 남기고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미연합사의 해체 및 작전권의 반환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용산 및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은 1990년 동아시아전략구상

8 《중앙일보》, 2003. 10. 10.

과 달리 대북한 전격전 수행과 대중국 봉쇄라고 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신군사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는 비록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의 외형적인 감축을 동반할지는 모르나 실질 전력 면에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며 그 성격도 훨씬 공격적으로 바뀐다.⁹

주한미군 재배치는 2003~2006년 사이에 150개 항목에 걸친 110억 달러의 전력투자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는 북한의 한 해 국방비의 7~8 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도입될 무기장비에는 요격 미사일인 PAC-3, 최신형 공격용 헬기로의 교체, 프레대터·헌터·쉐도우 등의 정찰·공격용 무인항공기, 신형정밀유도폭탄(JDAM, GBU-28 병커 버스터) 등이 들어 있다.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인 우위는 더욱 압도적이게 되어 미국에 의한 대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중 대결에 휩쓸리게 하고 한반도를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군사기지로 전락시킨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될 것이며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장으로 변할 것이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 또한 요원하게 될 것이다.

3. 미국의 신군사전략적 고려의 배경

미국은 신군사전략의 실행을 위해 기존 수준의 기지 이전이 아니라 그보

9 “주한미군은 지난 2년과 앞으로 3년 등 5년 동안 지휘 통제부터 미사일 기술 및 해공군력까지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재편을 통해 오산 공군기지-웁프리지와 새로운 동남부 기지 등 2개의 전략 허브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상원 군사위에서의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 2004. 4. 1)

다 몇 배나 높은 수준의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 협정 초안—이 안이 기본안으로 논의되고 있다—에 의하면 “대체 시설과 대체토지는 기존의 수와 규모가 아니라 새로운 미군기지의 기능과 임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기지의 기능과 임무’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지의 기능과 임무를 뜻한다. 즉 미국은 용산 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사실은 대북한 전격전과 대중국 봉쇄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 현 용산 미군기지의 시설가치가 미 국방부의 산정에 의하더라도 13억 달러에 불과한데 우리 정부가 그보다 몇 배나 많은 30~50억 달러로 이전 비용을 추산하고 있는 것은 신군사전략 실행을 위한 미군기지의 새로운 기능과 임무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기존 수준대로의 이전을 규정했던 1990년 합의와 달리 현재의 용산 이전 협정이 몇 배나 높은 수준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자신의 신군사전략의 실행을 위해 불평등한 1990년 협정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을 한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C4 정보 인프라’이다. 이는 1990년 합의 각서 및 양해각서에는 없지만 현 협정에는 대체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서울(용산)과 남태령, 기존 평택 기지에 있는 각각의 C4I를 통합하고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작전영역을 동북아로 확대하고 대북한 전격전에도 대비하려는 것이다. C4I가 미국의 대한반도 작전수행, 작전계획 5026의 수행, MD,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이를 재구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나라에 전가시키는 것이야말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실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뚜렷이 읽을 수 있게 해 준다.

이같은 C4 및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포함되

기 때문에 조 단위의 비용이 예상된다. C4 및 정보 인프라에는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수집수단(조기경보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따위)을 통제하고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전쟁수행에 적합한 정보로 만드는 시설이 포함된다. 또 주한미군 지휘소와 전 세계 미군 기지의 연락이 가능한 통신 시설, 주한미군 지휘소 병커, 그 안에서 단절되더라도 2개월 이상 작전지휘가 가능한 수준의 비축시설, 예비발전 시설, 외부가 화생방과 핵공격을 받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방호시설, 병커 버스터 같은 대형 폭탄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설, 대용량의 데이터 및 정보처리가 가능한 최신 컴퓨터 시설 등을 미 국방부 기준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C4I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 국방부가 주한미군보다 훨씬 그 기능이 떨어지는 C4I 구축을 위해 2001~2004년 사이에 1조5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수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체부지의 경우 110만 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1990년 26만8천 평의 4배가 넘는 규모이자 용산 미군기지의 78만 평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다. 이는 이전을 명목으로 오히려 기지를 더 확장하겠다는 이기주의이자 영구주둔을 위한 충분한 토지 확보와 신군사전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비용 부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부담 한도 미규정의 문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할 경우 우리 정부는 대규모의 대체부지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의 군사시설, 심지어는 유흥오락시설까지 지어 주어야 한다. 대체시설로는 사령부 본부, 행정국, 의료시설,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주한미군 및 가족 숙소, 포장도로, 배수로, 가로등, 조경, 담장, 문 등이 명시되어 있다. 조 단위의 C4I, 수천억 원의 미군주택, 병원, 학교, 체육관 등도 포

함된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아가 이전 비용에는 대체시설만이 아니라 모든 미군 및 가족들의 개별 이 사비용, 이전에 따른 청구권까지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체시설의 신축 및 개축은 미 국방부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보통 미 국방부 기준은 우리 기준보다 2배 정도의 비용이 든다.

결국 현재의 이전방식과 조건은 현 수준대로의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는 대체시설과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용 항목이나 그 한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미국이 얼마든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등이 그러한 예다. 이같은 표현들은 도저히 국가 간의 정상적인 조약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전 비용 부담의 부당성

불평등한 한미 소파 5조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이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미 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의 제공과 반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용산 기지에는 소파 규정상의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골프장, 오락 편의시설, 불법영업시설 등의 불법시설과 임의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군기능 수행과는 직접 관계없는 시설들을 지어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 자체가 굴욕적이다.

결국 주한미군 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기지 이전 지역의 교통망, 공공서비스, 효과적인 인프라의 제공을 의무화한 것은 기지 이전 지역의 개발 기

회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주한미군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지자체에까지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용산 기지터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데 이는 민족공원화를 통한 국민 자존심 회복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민간 매각은 정부가 미국을 위해 직접 부동산 투기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세계적으로도 모든 이전 비용을 그 나라의 정부가 부담하고 대규모 대체부지까지 제공하는 용산과 같은 굴욕적인 사례는 찾을 수 없다.

3. 이전 비용 30~50억 달러 추산의 문제점

이전 비용 30~50억 달러 추산은 용산 기지의 시설대체가치인 13억 달러의 몇 배가 된다는 점에서 현 수준보다 몇 배 높은 수준으로의 이전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0~50억 달러는 신 행정수도와 아산 탕정의 삼성 기업도시 건설비와 비교해도 3~4배나 높다. 이는 미국이 용산 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사실은 초호화의 미군기지를 새로 짓겠다는 것을 말해 준다. 게다가 30~50억 달러 이전 비용에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 평택 미군기지 확장시 주민들의 이주 정착비 및 보상금, 평택 도시기반시설 확충비, 용산 미군시설 철거비 등이 빠져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정부 추산보다 몇 배가 될지 모른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이 30~50억 달러, 30~40억 달러, 30억 달러 등으로 사람과 때에 따라 무려 20억 달러나 차이 나는 것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의 협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체부지 제공의 문제점

1. 평택 주민의 관점

용산과 미2사단을 합쳐 320만 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은¹⁰ 미군기지

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온 평택 주민들을 또 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평택 지역에는 K-55 공군기지, K-6(캠프 험프리)기지 등의 미군기지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있어 왔으며 그 면적은 무려 457만 평에 이른다.

미군기지로 인한 평택 주민들의 피해를 보면 미군기 굉음에 소가 놀라 날 뛰는 바람에 달구지에 탄 주민이 죽은 일이 있는가 하면 고막이 터져 평생 을 고생하는 주민도 있다. 평택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지 주변 6곳의 소 음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 소음도가 76.4~104.9dB로 2004년 1월 소음피해 보상 판결을 받은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 마을보다 더 심한 것으 로 나왔다.

주민들은 미군기지 기름 유출로 인한 농토와 수질오염, 고도제한 등의 침 해도 당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2001년 자료는 K-55 기지 전용 철도 가 도심 한복판을 통과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큰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 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더욱 참기 어려운 것은 주민들이 생계터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지 금 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50여 년 전 미군기지로 인해 강제로 자신들의 농 토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이들은 또 다시 자기 땅에 서 쫓겨나야 한다.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평택 주민들의 뜻은 2004년 5월 초 현재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른 국방부의 토지 매입이 매입대상 면적의 2.68%(1만7450평)에 불과한 데서 뚜렷이 드러난다. 국방부는 평택 지역 74만 평을 미군에 새로 제공하기로 한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3년 11월 토지수용을 공고하였다.

10 용산지만만으로 본다면 이전 명목으로 110만 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현 78만 평보다 훨씬 더 확장해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규모는 90년의 26만8천 평의 몇 배로 90년 합의보다도 더욱 후퇴한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2. 평택 전역의 미군기지화

만약 320만 평의 대체부지가 제공되면 기존 기지 457만 평과 합쳐 무려 800만 평이나 미군기지가 된다. 평택은 미군을 위한 도시가 되고 그에 따라 미군범죄, 교육환경, 문화적 황폐화, 도시개발의 기형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평택시의 균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대체부지 제공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평택 지역은 벌써 미군기지가 포화상태이므로 확장이 아니라 축소되어야 할 판이다.

평택기지의 신설확장은 기동력과 정밀타격력 위주의 새로운 대북 전쟁수행체계 가동 및 대중국 봉쇄라고 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데 그 의도가 있다. 이처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수행을 위해 우리 땅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한 영역이 외부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위한 평택기지의 신설확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점

이전 비용 전액 한국 부담은 19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문서는 적법한 서명권자 즉 외교부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이 없어 기관 간 협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조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의 경우 국회비준을 받도록 한 헌법 6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문서다.

비록 미국이 1990년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미합동위 합의각서를 1991년 우리나라에 강요해 체결했지만¹¹ 이는 조약 체결권이 없는 한미합동위 대표의 서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유효성이 부여될 수 없다.

또 이는 강제에 의한 조약은 무효라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53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효이다.

이처럼 이전 비용 한국 부담은 불법적인 1990년 협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적법성을 상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를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용산 협상은 1990년 합의를 무효화하고 대등한 자세에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는 방향에서 재협상되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 한미 상생의 관계를 위하여

용산 미군기지는 본격화되고 있는 남북 화해시대 또 남한의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10배에 이르는 남한 군사력의 압도적인 대북 우위를 감안해서, 그리고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의 원칙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의 기존 기지로의 축소 통·폐합 방식의 이전은 우리나라로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미국으로서는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굳이 우리 국민에게 비용을 강제할 필요도 없게 되므로 한미 양국에 다 같이 이익이 되는 방안이다.

이같은 축소 통·폐합 방식의 이전은 공여 목적과는 어긋난 미 대사관 직원 숙소나 미군 기능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골프연습장, 학교, 운동장 따위의 편의오락시설, 카지노, 극장, 클럽, 호텔, 식당, 학교, 호텔, 병원, 슈퍼마켓, 볼링장 따위의 불법적인 영업시설 등이 용산 기지 시설의 대부분

11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가 한국 측 정부 대표의 서명이 없는 불법적인 문서로서 무효라는 주장이 우리 정부 내에서 제기되자 미국은 91년 5월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합의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동위 합의각서라는 것을 만들어 와 여기에 당시 우리 측 소파 합동위 대표인 반기문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이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용산 미군기지가전 합의각서관련 대책 필요』, 안기부, 1991)

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 축소한다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1990년 합의 당시 용산기지 대체부지로 26만8천 평에 합의했다는 것은 현 용산기지의 불법적인 시설과 비군사 시설을 줄이고 기존 미군기지의 시설을 활용한다면 기존기지로의 축소 통·폐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도 2006년까지 주한미군을 1/3정도 감축할 계획이므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하는 축소 통·폐합 이전 방식은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및 미2사단의 재배치는 냉전 종식, 대결적 남북 관계의 화해·협력관계로의 대전환,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우리 주권과 국민 자존심,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